



액비유통센터들의 경영난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참여한 농경지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의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1일~9월 1일 양일간 대전시 청소년 유스호텔에서 개최된 '액비유통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액비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액비유통센터 운영자 및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담당자, 시·도, 시·군 공무원, 농진청, 농협, 양돈협회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액비유통센터 살포 농경지 0.2% 불과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유통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농림부가 전국 정부지원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경종·축산농가 참여현황 및 액비 살포 실적, 수지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유통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경종농가수와 참여면적은 모두 1백21호에 1백92ha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농경지 면적(1,836ha)의 0.2%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농경지당 살포량도 지난 2004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2004년에는 농경지 82ha에 모두 4,806톤의 액비를 살포해 ha당 58.6톤을 살포했으나, 2005년에는 118ha에 5,898톤의 액비를 살포하여 ha당 50톤을 기록, 살포면적이나 살포량은 증가했으나 ha당 살포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조사 대상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지난해 살포실적이 전무한 유통센터 주체가 6개소나 됐으며 살포실적은 있으나 1천톤이하인 주체도 7개소에 달한 반면 2만톤 수준인 주체도 7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센터의 경영난 심화추세

또한 유통센터들의 경영수지가 지난 '03년 개소당 5백30만원 흑자에서 '04년 4백50만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9백50만원까지 늘어나 유통센터들의 경영난 심화추세를 뒷받침했다.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서재호 사무관은 "각종 통계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통센터의 전반적인 현실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특히 유통센터 운영이 축산농가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비즈니스가 곤란한데다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이나 기록관리가 부실한 점 등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 이상철 자연순환농업팀장은 “살포 실적이 적은 부실유통센터가 많이 존재하는데, 정부 정책은 페널티 제도보다는 우수 유통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종합토론에서 정종만 양돈협회 강원도협회장은 “인접시군에 액비를 살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시군에 액비살포를 신고하는 방법보다는 전문업체가 살포대상 면적에 사전신고하게 하는 방법이나 재활용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대해 이상철 팀장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강원·인천, 충청, 전라·제주, 경상도 4개 권역별로 분임토의도 진행됐다. **양근**

자연순환농업 우수 시·군에 자금 지원

농림부, 연말까지 실적 평가

우수 5개 시·군 선정, 2007년에 20억원 지원

농림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을 선정, 2007년에 총 20억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을 선정, 내년에 총20억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 내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노력도, 액비저장조 관리, 교육·홍보 실적 등 15개 항목이며, 사업부실 사례, 관내 부적정 처리사례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자원화 우수 시·군 선정 절차는 시·도에서 시·군의 자체 평가 결과를 검토 분석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상위 2개 시·군을 농림부에 추천하면 농림부에서는 추천 시·군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 가축분뇨자원화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인센티브 시행으로 향후 지자체가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인센티브 도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